

서울시, 모아주택 7개 지역 확정

〈시흥·변동 등〉

3867세대 공급… 814세대 임대

市, 개별 모아주택 사업 본격화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등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이주갈등 차단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총 3867세대 주택을 공급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시행계획이 신속히 결정됨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강북구 변동 458-2번지 일대 ▲강북구 변동 471-11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으

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86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814세대는 임대로 공급된다.

먼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강북구 변동2지역(변동 454번지 일대)은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기존 843세대보다 256세대 늘어난 총 1099세대(임대 266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변동 458-2번지,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12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개 사업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총 229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9세대(임대 106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6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557세대(임대 110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7개 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644세대(임대 14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8개 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35세대(임대 92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며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과 약,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안산시화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될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감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 첫 삽

공식 명칭 ‘새로숲’… 989억 투입

경기도는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인 경기지방정원이 공식 이름으로 ‘새로숲’을 채택하고, 지난 17일 안산시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새로숲’은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단순한 공간의 명칭을 넘어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과 함께 회복과 공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과거 쓰레기와 오염의 공간이었던 안산시화매립지를 생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도는 총 9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5만㎡ 부지에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했고,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1단계 개방은 2026년 4월로 예정됐다. 정원 18만㎡와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나머지 구역의 정원시설 및 센터 건축을 완료해 2027년 전체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정원지원센터, 방문자센터를 포함해 맞이정원, 감상정원, 휴식정원, 기후정원, 참여정원 등이 조성된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정원시설이 아니라 교육·체험·휴식이 가능한 복합 정원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정원 조성과 함께 안산갈대습지, 화성비봉습지 등 인근 생태자원과 연계해 정원-습지-수변을 연결하는 복합 생태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남부권을 대표하는 생물다양성 중심축이자 친환경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는 정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생태 투어, 정원산업 박람회 등을 연계해 장기적으로는 정원문화의 거점으로 ‘새로숲’을 성장시킬 방침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AIDT ‘교육자료’ 전환… 현장 도입 탄력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교육부,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 개정
정의·범위 삭제… 법률 중심 재구성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법률 개정으로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면서 관련 규정이 대폭 정비됐다. 정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교과용 도서 체계를 법률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시행령 전반의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위법 내용과 시행령 간의 체계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교과서가 무엇인지,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지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 사항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면서 시행령에서 같은 조항을 삭제해 중복을 없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교과서 제도를 법률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교육 자료로 분류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예: AI 학습보조 프로그램

웹)’은 더 이상 교과용 도서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던 교과용 도서 검정 방법과 합격 공고 규정도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완전히 분리돼 ‘교육자료’로 전환된 셈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 학습자료는 교과서 수준의 엄격한 검정 절차 없이 보다 유연하게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교과용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서책’을 ‘도서’로 수정하는 등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현진 기자

기차바위 일대 산림휴양 명소 재탄생

의정부시 전망대·쉼터 조성 사업 완료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사진)는 수락산 대표 명소인 ‘기차바위 전망대 및 쉼터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이번 사업은 등산객 안전 강화와 휴식 공간 확충, 조망 명소재정비 등을 목표로 추진돼, 기차바위 일대가 새로운 산림휴양 명소로 재탄생했다.

그동안 기차바위 일대는 정상부의 탁월한 조망 가치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된 시설과 부족한 휴식공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전망대(84㎡)와 쉼터 2개소(45㎡)를 새롭게 조성하고, 안전로프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기차바위 주변은 안전·휴식·조망의 삼박자를 갖춘 공간으로 개선, 등산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산림휴양 환경이 조성됐다.

/의정부(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정부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확대”

학교 현장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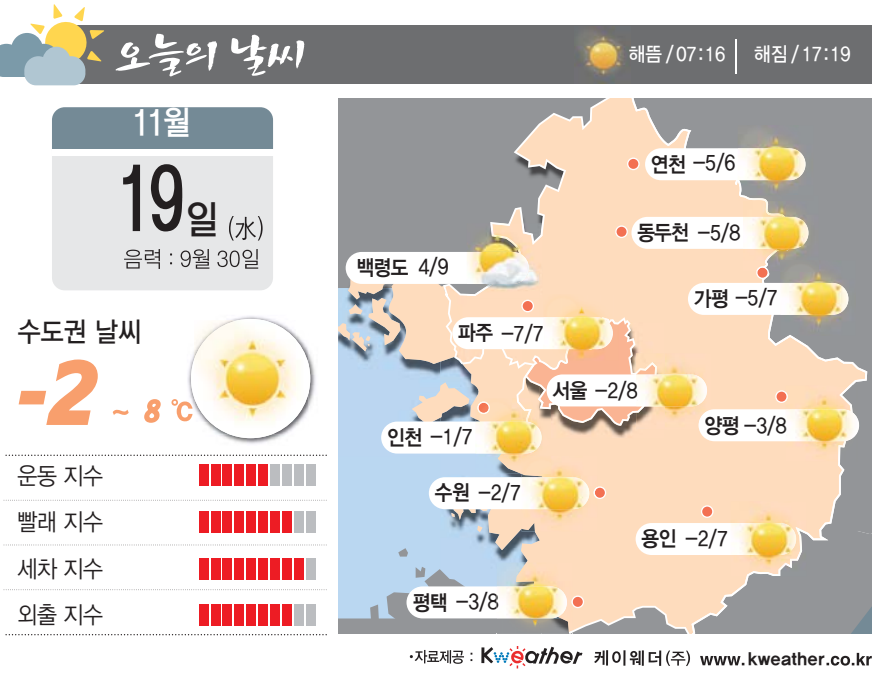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학생 대상 헌법전문강사 강의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05개교 603학급, 중학교 71개교 311학급 등 총 276개교 914학급에서 법무부 소속 헌법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기본권과 인권, 법의 역할 등이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

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은 헌법재판연구원원이 담당한다. 교수진이 직접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하며 전국 5개 시·도 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된다.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강의 대상에는 일반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이현진 기자



- ▲ 리비아 북동부 바니 왈리드 시에서 대규모 폭발
- ▲ 중일 관계 악화 속 주일 미대사 “센카쿠 포함 日방어 약속”



- ▲ 트럼프家, 사우디 기업과 ‘몰디브 호화 리조트’ 건설 사업 협력
- ▲ 中-시리아 외교장관 회담…“테러 대응 협력 강화”

/사진 뉴시스

- ▲ 中·日 고위급, 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 후 첫 베이징 대면 회담
- ▲ 우크라 前부총리, 에너지 부패 스캔들 연루 체포 영장